

경수로사업 추진현황

2004. 11.30(화)

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

□ 사업추진 경과

- 경수로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「제네바 기본합의」(‘94.10월)에 근거하여 추진
 - 북한의 핵시설 동결·해체와 연계하여 1,000MWe 가압경수로 2기(한국형 원전)를 북한에 제공

<제네바 합의 요지>

-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발전소 대체
 - 북한은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
 - * 동결대상 시설 : ①5MWe ②50MWe(건설중) ③200MWe ④재처리시설 ⑤ 핵연료봉 공장
 - 5MWe 실험용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은 안전조치후 제3국 이전
 -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1,000MWe 경수로 2기 제공
 -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(중유 연간 50만톤) 제공
- 미·북관계 개선
 - 무역 및 투자 제한 완화
 -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, 양국관계 진전시 대사급으로까지 격상
- 한반도 비핵화 노력
 -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 보장
 -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
 - 북한의 남북대화 착수
-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
 - NPT 잔류 및 IAEA 안전조치 이행
 - 비동결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
 -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이전 IAEA 안전조치 전면 이행

- 경수로사업 수행을 위해 한·미·일 주도하에 「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」(KEDO)를 설립('95.3월)
 - * EU도 '97.9월부터 집행이사국으로 참여
 - 국내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「경수로기획단」을 설치·운영('95.1월)
 - * 경수로기획단장은 KEDO의 한국측 집행이사로 활동하며, '00.9월부터 KEDO 집행이사회 의장직 수행
- KEDO-북한간 「공급협정」('95.12월), KEDO-한전간 「주계약」('99.12월) 체결 등 사업 추진체계 마련과 함께,
 - 부지준비공사 착공('97.8월), 본관 기초굴착공사('01.9월), 최초 콘크리트 타설('02.8월)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
 - 사업이 일시중단된 '03년 11월말 기준 시공(21.6%)·설계(62.3%)·기자재 제작(43.2%) 등 종합공정율 34.54% 진행
-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통행·통신 지원 및 부지관리 추진
 - 금호부두 건설·사용, 해로('01.9월부터 주1회 객화선 운행, 바지선 수시 운행) 및 항공로(양양↔선덕) 개설('02.7월)·운용
 - 평양-일본을 경유하는 부지-국내간 통신(16회선) 및 북경 경유 우편서비스 개설
 - 병원 운영('02.7월) 및 응급환자 대비 긴급 후송체계 운영
 - 부지내 안전사고 및 무질서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에 만전

- 북한과는 「공급협정」 체결 이후 북핵문제 대두('02.10월) 까지 동 협정상 예정된 13개 후속의정서 협상을 지속하고
 - * 영사보호, 통행, 통신, 부지인수, 서비스이용, 미지급시조치, 훈련, 품질보장 등 8개 기체결 (원자력손해배상, 인도일정, 상황조건, 사용후 연료, 핵안전 및 규제 등 5개 미체결)
- KEDO-북한간 고위전문가회의 및 분야별 실무전문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기술적 사항을 수시 협의
- 완공후 발전소 운영을 담당할 북측 기술인력(규제요원 25명, 운영요원 123명)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
- 경수로 건설공사비는 재원분담결의('98.11월)에 따라 조달하여 '04.11월말 현재 15.3억불 투입(한국 11.1, 일본 4, EU 0.2)
 - * 「재원분담 결의」 요지 : 예상사업비 총 46억불, 한국이 실제공사비의 70%(원화), 일본은 10억불(엔화), 미국은 중유공급('02.11월까지 총 비용 5억불 중 3억 7천만불 부담) 및 부족분 조달에 지도적 역할 수행
- 우리는 경수로 공사비 분담금을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
 - * '99년부터 '04.11월까지 총 2조 3,527억원의 국채를 발행, 이중 7,147억원을 상환하여 순발행액은 1조 6,380억원

□ 사업 일시중단(suspension)

- '02.10월 북핵문제로 KEDO 집행이사회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('02.11월)에 이어,
 - 1년간 사업 「일시중단」 (suspension)을 결정('03.11월)
- '03.12.1 사업의 일시중단 발효에 따라 설계, 제작, 건설 등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정을 중단했으며,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·관리(preservation and maintenance) 조치 실시

- 현장 인원은 중단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'04.11월말 현재 금호 부지에는 KOK 대표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 중
* '03.12월 우즈베크인력이 전원 철수하였으며, 북측인력 100명도 '04.2월 전원 철수
- 부지 현장 및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 관리·유지를 위하여 부지 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 및 품질보증 검사 정기적 실시
- 사업의 일시 중단과 관련한 북한의 협조 확보 및 장비 등 반출 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대북협상 실시(KEDO-북한간 고위전문가회의 2회, 실무협의 5회 등)
 - 협상을 통해 중단기간중 보존·관리활동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북측의 협조 확보하였으나 '장비반출금지조치' 문제는 미해결

□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

- 한·미·일·EU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'03.11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(suspension) 결정시 중단기간 만료('04.11.30) 전에 경수로 사업 장래에 관해 협의·결정하기로 합의
 -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시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, 6자회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「1년 중단 연장」 방안을 집행이사국들에 제시하고 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
- KEDO집행이사회는 '04.11.26 경수로사업 중단조치 1년 연장을 결정·발표
 - 중단연장기간 만료 후 사업장래는 중단연장기간 종료('05.11.30) 전에 집행이사국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
-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상황 등을 보아가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단기간중 사업의 보존·관리 등 추후 사업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 ☐